

다변화된 2차적 상징: 민주평화론과 동북아시아

신욱희*

21세기 세계정치적 변화는 기존 국제정치학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체제 안정을 중시하는 문제해결이론을 넘어서는 메타이론적 탐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체제 수준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를 실질적인 정책 목표와 연결시키고 있는 민주평화론은 기존의 이론과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아울러 중요한 점은 그러한 접근이 갖는 적실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보편성을 대변하는 미국의 민주평화론은 장기적인 전망에서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선순환의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한편으로 미국의 자유주의가 갖는 현실주의적 속성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각 단위가 보여주는 특수성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양안관계,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2차적 상징에 대한 대안적 모색이 요구되며, 이는 현상유지와 전환의 문제점을 절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질서에 대한 고려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탈냉전, 민주평화론, 동북아시아, 2차적 상징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주요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E-mail: shinir@snu.ac.kr)

1. 서론

냉전의 종언은 국제정치학의 현실과 이론의 양면에서 모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양극체제의 붕괴를 “과거로의 복귀”로 받아들이며 다극화된 체제가 오히려 불안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고(Mearsheimer, 1990), 다른 쪽에서는 동구진영의 와해를 “역사의 종언”이라고 부르며 탈냉전과 그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의 개방을 통해 단일화된 세계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된 체제가 도래할 것으로 낙관하기도 하였다(Fukuyama, 1992).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의 종언과 세계화의 심화가 궁극적으로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체제의 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다나카, 2000), 2001년의 9·11 테러의 존재는 국가 간의 분쟁의 재발에 대한 비판론도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albot and Chanda, 2001).

이와 같은 상이한 분석과 예측은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 논쟁과 맞물려 지속적인 학문적 토론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이론적 발전은 기존 패러다임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과 함께,¹⁾ 새로운 기준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월츠(Waltz)가 세 가지의 상징(image)으로 각각 명명하였던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체제)”의 문제(Waltz, 1959), 즉 분석수준의 문제에 따른 국제정치이론의 재고도 그 중의 하나이다. 체제수준/구조적 요인에 의한 단위 간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2차 대전 이후 이론적 논의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면,²⁾ 현재는 단위수준/비구조적 요인에 의한 체제의 안정성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2차적 상징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민주평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평화론이 현 시기에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것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의 세계 내지 지역전략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시대 확장의 목표는 정당의 교체와 무관하게 미 국가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1) 구성주의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 이론의 내용을 위해서는 신옥희(2004)를 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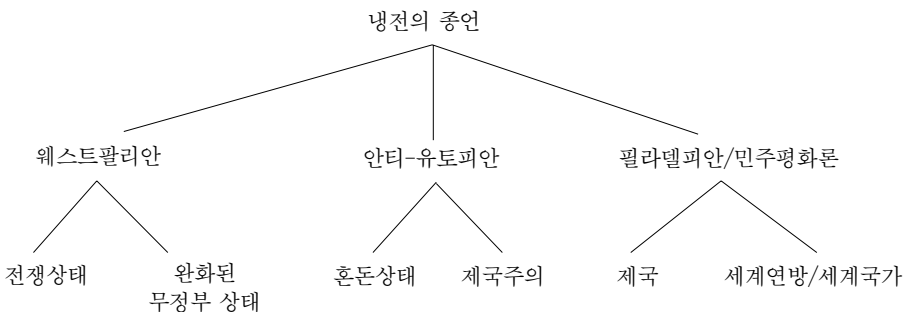
2)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안정성 논쟁이 그 전형일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 이르러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이론으로서 민주평화론에 대한 이론적/방법론적인 논의에 비해서 그 정책적 의미나 이 시각의 지역적 적용과 비교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민주평화론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 지역에서의 2차적 상징에 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논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21세기 세계정치의 특성과 그를 주도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다룬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동북아 지역정치의 특징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민주평화론, 혹은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신칸트주의 평화론의 지역적 적용이 갖는 제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동북아에서의 2차적 상징의 문제와 그 해결 가능성을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2. 21세기 세계정치와 미국의 전략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냉전의 종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전망은 비관론과 낙관론, 그리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예측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냉전 이후의 국제정치에 대한 논쟁이 주로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적 비관론과 자유주의적 요인을 가미한 낙관론의 대립이었다면, 21세기의 세계정치에



〈그림 1〉 21세기의 세계정치

대한 논의는 3차적 상징과 2차적 상징, 즉 체제와 단위의 본질적인 변화를 포함한 시나리오로 발전하고 있다. 이노구치의 웨스트팔리안, 안티-유포피안, 그리고 필라델피아 모델의 3분법이 그 하나의 예인데, 그는 각 모델의 대표적 이론가로 키신저(Kissinger), 헌팅턴(Huntington), 그리고 후쿠야마(Fukuyama)를 들면서, 각각의 지정학적 틀, 지경학적 토대, 지문화적 연계의 형태를 설명한다. 이노구치는 세 가지 핵심적인 동인인 민족국가의 지속성, 인구-환경적 조건의 악화, 기술적 혁신의 변화 양상에 따라 미래의 세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Inoguchi, 1999). 다나카의 “새로운 중세론”도 이와 유사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근대권, 혼돈권, 그리고 새로운 중세권이 혼재하는 것으로 21세기 세계체제를 묘사하고 있다.³⁾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유주의적 관념(idea)이 강조되면서 국가주권에서 인민주권으로의 정치적 주체의 전환을 상징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모델의 내용이다. 듀드니(Deudney)는 합중국의 건설과 남북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미 연방주의 체제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면서, 미국은 당시 무정부 상태에서의 위계적인 국가관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의 웨스트팔리안 체제에 대한 의도적인 대안으로서 공화주의적인 필라델피아 체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나아가서 현재의 국제체제의 대안으로서 미국의 연방체제의 세계적 확대 가능성, 즉 세계연방에 대한 시사로 이어지고 있다(Deudney, 1996). 이와 같은 구상은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공화정의 존재, 국제적 차원에서의 평화연합의 결성,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통상의 정신”을 보존하는 세계법의 제정으로 이루어지는 칸트의 영구 평화의 논의(Kant, 1983), 즉 민주평화론의 내용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미 미국의 정체(polity)는 개별 단위의 수준이 아닌 체제 수준의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자유주의 관념의 역할에 대해 최정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자유주의 정치적 이념의 중심적 역할은 모든 시민들의 공적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원리로부터 변화하여 이제는 다문화주의의 논의가 시사 하듯 여러 집단들,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생명력을 갖는 각종 집단들 간의 공존 관계를 공공 차원에서 규

3) 다나카(2000).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지역적인 수준에 따라 각 모델이 차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정하는 공존 방식(modus vivendi)의 위치로 전환되어 왔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치는 이미 오래 전에 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족국가에서 서서히 여러 민족 집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유주의라는 보편주의 이념에 근거한 제국(empire)으로 변모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될지 모른다(최정운, 1999: 148-149).

탈냉전의 국제정치가 다극체제 혹은 일극체제로서의 국제체제의 안정성 논의라는 3차적 상징의 이론 논쟁의 연속성 상에 있었다면 21세기 세계정치의 논의는 3차적 상징과 2차적 상징이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담론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국이나 세계국가에 대한 논의가 그에 해당한다. 하트(Hardt)와 네그리(Negri)의 저서에서 시발한 제국론은 현 시점의 세계체제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Hardt and Negri, 2001). “맑스의 얼굴을 한 토폴러”라고 불리는 이들의 논리는 세계정치의 다수로서의 노동의 역할을 강조하기는 하나 “제국주의”의 소멸과 주권의 전환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안병진, 2005; Barkawi and Laffey, 2002).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미국을 넘어서는 서구 국가들의 네트워크적인 질서로서 제국을 상징하고 비 서구국가들의 준제국주의적(quasi-imperial) 성격을 지적하기도 한다(Shaw, 2002). 구성주의자인 웬트(Wendt)는 제국의 논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권위의 이전 현상을 설명한다. 그는 목적론(teleology)과 자기조절이론(self-organization theory)이라는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을 원용하면서 국제체제에서 국제사회, 세계사회, 집단안보의 단계를 거쳐 세계국가라는 새로운 안보 공동체가 등장하는 과정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있다(Wendt, 2003).

세계연방 혹은 제국이나 세계국가와 같은 새로운 체제의 형성 논의는 왜 21세기에 있어 미국의 압도적 지위에 대한 대항균형(counter-balancing)이 등장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자들도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하여 왔는데 첫 번째 설명은 그러한 시도가 비효율적이고, 능력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며, 미국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가 독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Worlforth, 2002). 두 번째의 설명은 미국이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세력균형이 아닌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의 전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며,⁴⁾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대해 안보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항하는 균형을 형성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제국이 주는 경제적 이익의 고려와 함께,⁵⁾ 각 국가의 엘리트들 사이의 관념적 연대의 존재에서 그 답을 찾는다.⁶⁾ 여기에서 중시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가치 혹은 제도의 공유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 민주주의의 확산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아래의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한 연속성을 보여준다.

국제적 리더십의 토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이상과 가치의 힘이다. 민주주의적인 정부는 공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고,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증진시키며, 법의 통치를 지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 한다. 그러므로 전 세계를 통한 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에 대한 추세와 흐름은 미국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에 참여하면서, 민주적인 단체와 제도를 지지하고, 우호적인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지지하고 있다(백악관, 2000: 169).

지난 세기의 많은 시간 동안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험한 바다 가운데 바위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람 속의 씨앗이 되어 많은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적인 믿음은 우리나라의 열망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타고난 소망이며, 우리가 이행하지만 독점하지 않는 이상이고, 우리가 간직하면서 전파하는 신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225년이 지난 지금에도

4) 매스탠두노(Mastanduno, 1997)는 미국이 현상유지 국가에게는 확산, 수정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응징, 중간 위치의 국가는 관여와 통합의 정책을 구사함에 의해서 일국체제의 기간을 보존하려 한다고 이야기 한다.

5) 퍼거슨(Ferguson, 2002)은 대영제국의 사례를 들면서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장점과 자유주의적 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6) 오웬(Owen, 2001/2002)은 정책결정 엘리트가 개념화하는 위협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다고 보고, 자유주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각 국가의 미국에 대한 대항균형의 의도와 정도가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가야할 먼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

자유와 우리나라의 적들은 오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역사와 선택에 의해 세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자유를 선호하는 세력균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동맹과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만함이 없이 우리의 목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함과 힘을 갖고 공격과 잘못된 신념에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우리들의 나라를 탄생시킨 가치를 설파할 것입니다(Bush, 2001).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장하는 자유의 서클(circle of freedom) 논의는 민주평화론의 구체적인 정책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⁷⁾ 하지만 현재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 세계전략의 전개를 칸트적 속성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흡스적 측면과의 연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⁸⁾ 이는 구체적으로는 9·11의 영향과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역할 증대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개디스(Gaddis)는 9·11 이후 미국의 거대전략의 특징을 선제공격, 일방주의, 헤게모니의 추구로 묘사하며, 그 기원을 존 애덤스에서 찾는다(개디스, 2004). 신보수주의자들의 정책 일선에서의 등장은 점차 미국의 노선을 이상주의에 기초한 급진적 전략으로 바꾸어 놓았으며,⁹⁾ 그 결과 타 지역에서의 국가건설(state-building)의 문제가 중요한 미 외교정책의 의제로 등장하였다(Fukuyama, 2004). 따라서 현 미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오히려 자유주의에 기반한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7) 자신을 21세기의 에치슨으로 간주하는 라이스는 세계를 민주주의 국가군, 민주화 과정의 국가군, 그리고 비민주국가군으로 구분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체를 심화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미 외교정책의 임무라고 지적한다(Young-Sun Ha, 2005: 1-2).

8) 가드너(Gardner, 1984)는 월슨 대통령 이래의 미 외교정책에서 어떻게 자유주의적 관념과 권력정치적 고려가 결합되어 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9)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 이념체계, 정책적 반영의 형태를 위해서는 남궁곤 편(2005)을 볼 것.

10) 미어샤이머(Mearsheimer)에 의하면 방어적 현실주의자는 안보를 추구하면서 현상유지적인 것에 반해 공세적 현실주의자는 권력을 극대화하려 하며 현상변경적인 속성을 갖는 차이점을 갖는다((Mearsheimer, 2001).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미 외교정책의 목표를 강대국 간의 21세기형 협조체제의 구축에 두고 불량국가의 사멸에 있어서도 정권교체보다는 정권진화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이와 같은 미 정책의 자유주의적 요소와 현실주의적 요소의 결합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네트워크적인 제국의 질서를 선도하기 보다는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제어하려는 근대적 구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된다(안병진, 2005: 29). 결국 시장과 민주주의, 또는 인권 증진 등의 자유주의적 목표들은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잠재적 패권에 대한 견제와 북한의 정권 변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¹¹⁾ 그러한 이유로 미국이 동북아에서 추구하는 제도의 구축도 자유주의 동맹 혹은 민주 안보공동체로 지칭되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적 다자주의(concentric multilateralism)의 형태이거나(Nau, 2002: 6장), 6자 회담의 연장으로서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의 안보협의체의 형태로 제안된다.¹²⁾ 하지만 이러한 멤버십의 차별이 존재하는 다자적 제도가 과연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적 거버넌스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겠다.

3. 동북아 지역정치의 특성과 민주평화론의 한계

21세기 세계정치의 특성이 모든 지역적 수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노구치는 높은 경제 수준의 북반구(North)에는 필라델피아 체제가, 그리고 좀 더 역동적인 남반구(South)에는 안티-유토피안이나 웨스트팔리아 체제가 미래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다나카도 동북아시아를 새로운 중세권과 근대권의 복합적인 체제로 묘사하고 있다. 냉전의 종언 이후 경제의 우위(primacy of economics)가 세계적인 추세였던 시기에도 동북아는 안보

입장을 선호하는 하스 식의 방어적 현실주의자는 아직까지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겠다(하스, 2005).

- 11) 장달중, 임수호(2004). 두 저자는 문명충돌론과 역사종말론/민주평화론을 유라시아에서 적대적 헤게모니의 등장 저지를 위한 두 축의 봉쇄정책의 기저로 간주하며, 미국의 반 테러전쟁의 수행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연결된 것으로 본다.
- 12) 후쿠야마는 이 기구가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비하거나 일본의 재무장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Fukuyama, 2005). 하지만 동북아의 또 다른 발화점인 양안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찾기 힘들 것이다.

의 우위(primacy of security)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유럽의 지역정치가 평화를 위한 초벌칠이 되어있는(primed for peace) 상태로 묘사되는 반면,¹³⁾ 동아시아는 경쟁의 조건이 성숙되어 가는(ripe for rivalry) 장소로 간주되었다(Friedberg, 1993/1994).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과 이에 부과되는 정책적 처방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제체제가 갖는 구조와 단위, 그리고 과정의 각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탈 냉전기 유럽의 다극체제에 대한 논쟁이 비판론과 상대적 낙관론이 엇갈렸던 것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분석은 현실주의적 낙관론과 비판론의 교차와 더불어 자유주의적 시각에서의 비판론이 혼재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권력정치적 시각에서의 일반적인 비판적 전망과는 달리 로스(Ross)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체제적 성격, 즉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중국의 양극구조로 인해서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중국이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해군력에 의존한 미국의 균형유지 능력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하지만 프리드버그(Friedberg)는 탈 냉전기의 동아시아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다극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비판론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냉전 이후의 유럽이 다극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주요한 이유로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레짐의 성격 변화라는 2차적 상징의 요인을 들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비구조적인 변수에 의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유럽과 달리 “열정에 대한 이익의 승리”라는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동아시아는 경제적 통합과 다자적 제도의 미비와 더불어 정체성의 문제와 영토 분쟁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안정 요인은 바로 민주국가

13) 벤 에베라(Van Evera, 1990/1991). 벤 에베라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비롯한 전쟁의 유발 요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유럽 평화의 낙관론을 전개한 바 있다.

14) 로스(Ross, 1999). 하지만 양극체제와는 다른 동북아 지역체제의 구조적 전망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부시(R. Bush, 2005)는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 협조체제, 양극체제, 미중의 공동관리 체제, 미국중심 체제, 중국중심 체제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와 비민주국가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존재로 인식되며, 이는 결국 민주화를 통한 평화라는 자유주의적 처방을 시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Friedberg, 1993/1994).

여기서 우리는 민주평화론과 그 라카토스적 보완 형태인 신칸트주의적 평화론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러셋(Russett)과 오닐(Oneal)은 “민주국가 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의 경험적 발견에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변수들을 덧붙여서 “평화의 삼각구도”를 제시하였다. 민주주의가 가장 핵심적인 독립 변수가 되고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기구가 부차적 변수로 첨부된 이 신칸트주의적 이론의 명제는 간단하게 다음의 셋으로 정리되고 있다.

1. 민주주의는 갈등을 감소시킨다.
2.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은 모두 갈등을 감소시킨다.
3.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감소시킨다.

반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분석을 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궁극적 주장은 세 변수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각 변수가 갖는 평화적인 영향이 현실 주의가 전제하는 국제체제의 악순환(vicious cycle)을 깨고 선순환(virtuous cycle)의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Russett and Oneal, 2001). 나아가서 아이켄베리(Ikenberry)는 이 세 요인의 단순한 결합으로는 2차 대전 이후의 긴 평화(long peace)의 시기를 설명할 수 없으며, 민주적 통치,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국제관계의 제도화의 질서를 창출해낸 주체(agent)로서의 미국의 패권적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Ikenberry, 1999).

하지만 이와 같은 단위의 속성과 과정, 그리고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자유주의적 평화의 논의를 21세기의 동북아에 적용해 본다면 각각의 분석에서 유럽의 사례와는 다른 유보적인 관찰들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¹⁵⁾ 제도화된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서부 유럽에 비해서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적 현실은 훨씬

15) 칸트주의적 평화론의 동북아 적용에 대하여 낙관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작업으로 박봉현(2005)을 참조할 것.

선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민주평화론의 동북아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구별과 민주화가 가져오는 국제정치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라고 하겠다. 스나이더(Snyder)는 민주화의 전환적 과정이 민족주의의 강화나 인종적 갈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Snyder, 2000). 헤chter(Hechter)도 간접적 지배에서 직접적 지배로의 이행이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게 되고 대외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로 전개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Hechter, 2000). 이행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국내중심적인 정책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적한 솔링겐(Solingen)의 분석도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Solingen, 1998: ch. 4).

민주화와 민족주의 사이의 인과관계는 중국, 대만, 한국, 북한, 일본이라는 구성단위로 이루어진 동북아 지역체제의 국제정치적 이해에 있어서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민주화는 중앙-지방관계나 소수 민족의 문제와 연결되어 다양한 안보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급격한 국내정치적 전환이 중국의 내부안보(internal security)를 위협하여 중국 정부의 경계 대상이 되거나 민주화의 진전이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중국 대외정책의 공격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대만의 민주화는 대만 민족주의의 대두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양안관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예를 이미 보여준 바 있었다(Chang, 1996).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주화의 과정이 반드시 주변국과의 협력 증진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민주화의 진전은 반미감정의 증대와 일본과의 정치적 마찰의 증가와 일치한다. 다시 말하자면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그 국가의 대외관계를 협력적으로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잠재적 민족주의의 경향은 제도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루오프(Ruoff)는 일본 천황제의 기반을 고찰하면서, “일본의 시민사회는 자유주의적이고 일본의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종전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일본 사회에서 우익 집단이 갖는 영향력과 그 확대의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Ruoff, 2001).

경제적 연계 확대가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능주의적 주장은 동북아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을 갖는다. 즉 국경을 넘어선 자연경제권의 효율성과 열린

지역경제체제의 장점을 부인하기는 힘든 것이다(Cossa and Khanna, 1997; Zoellick, 1997/1998)). 하지만 21세기 초에 있어서도 동북아에서의 안보의 우위 현상이 경제적 상호의존의 과급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논쟁의 핵심을 이루는 절대적 이득과 상대적 이득의 문제에 있어 동북아의 국가들은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신뢰의 부재와 경제적 이득의 격차가 안보적인 자원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로 말미암아 상대적 이득의 계산에 따라 행동하며, 이는 협력의 제한과 갈등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중관계, 중일관계, 남북한관계, 그리고 양안관계 등의 대부분의 쌍무적 관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아시아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났던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취약성의 증대 문제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유럽의 경우에서 볼 때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변수는 제도의 변수와 밀접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하지만 유럽의 협력 사례에 있어서도 제도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매개 내지는 종속변수로서 분석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¹⁶⁾ 부잔(Buzan)은 다자적 협의를 통한 공동안보의 조건으로 다원화된 권력분포의 구조, 대내적인 통합과 대외적인 투명성을 가진 국가, 그리고 문명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적 요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마지막의 단위 사이의 사회적 요인에 있어 공유된 가치의 부재와 갈등적인 집합정체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동북아시아는 유럽과는 매우 대조적인 특성을 보여준다.¹⁷⁾ 고병익 교수는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사실상 서로를 멀리하고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근대에 있어서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은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¹⁸⁾ 문제는 이러한 상호 소원의 현상이 근대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서로 상충적인 것으로 변모해 왔으며, 그 결과 형성된 상호 대립적인 민족주의의 존재는 미래

16) 하나의 예로 리세-카펜(Risse-Kappen, 1996)을 볼 것.

17) 험머(Hemmer)와 카젠스타인(Katzenstein)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다자주의, 아시아에서는 쌍무주의를 중심으로 질서가 구축된 것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서로 다른 정체성에 의한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한다(Hemmer and Katzenstein, 2002).

18) 고병익(1995). 야마자키는 유럽에 비교해서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문명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시아는 개별적인 국가나 민족적인 문화, 문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Yamazaki, 1996).

의 지역 공동체 형성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검토는 동북아 지역정치에 있어 관념이나 정체성의 역할, 그리고 역사와 기억의 정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공(Gong)은 동아시아를 문명의 충돌이 아닌 “역사의 충돌”의 장으로 묘사하면서 기억과 망각의 문제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논하고 있다. 그는 역사는 협상의 도구로서 전략적 제후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의 발전은 역사 인식에 따른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고, 민주화에 따라 역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감정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이야기 한다(Gong, 2001). 그 결과 역사의 해석이나 그에 따른 인식 상의 괴리가 동아시아에서의 기능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시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에서 아직도 반식민주의 대 자유주의의 구도 사이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본문제(Japan problem)”는 독일문제와는 달리 지역적 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 혹은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다자적인 안보 레짐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민주평화론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이념적 공통성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적 통합이 모색되는 자유주의적 접근은 반대로 비자유주의적이라고 정의되는 행위자와의 갈등을 쉽게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자체적인 지역적 거버넌스의 모델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의 확대 재생산이다. 아차야(Acharya)는 동아시아 안보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규범과 과정 중심 접근법의 발전 양상을 지적하면서, 이 지역의 국가들은 공식적인 조약이나 동맹을 거부하고 주권개념에 의존하면서, 연성 제도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지역주의의 경향을 만들어 왔다고 이야기 한다(Acharya, 2003). 아차야는 ASEAN + 3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북아 3국이 포함될 경우에 생기는 권력 분포의 격차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동남아와는 달리 동북아시아의 다자적인 안보협력체 구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한계는 각각의 단위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주권적 형태와 그것에 따르는 멤버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 있어서는 지역적 거버넌스의 문제보다는 각 단위의 거버넌스의 문제가 먼저, 혹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현존하는 정체

(polity)의 국내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이다.

4. 동북아시아에서의 2차적 상징 논의

자유주의적 제국이나 세계연방과 같은 21세기 세계정치에 대한 낙관론적인 견해는 근대적인 국제사회에서 세계사회, 혹은 탈 근대적 공동체로의 이전 과정을 상징한다. 하지만 동북아는 진술된 것처럼 아직 국제사회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단일한 2차적 상징으로서의 주권국가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국제체제의 논리가 자체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 “수입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Badie, 2000),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은 각 나라로 하여금 미완의 근대 프로젝트 완수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각 나라에 있어 제도로서의 근대국가의 전과 이전에 동일한 경계를 가진 정체성, 즉 원민족주의(primordial nationalism)가 존재했었다는 사실과,¹⁹⁾ 식민주의와 양차대전, 그리고 냉전이라는 독특한 근대사의 존재로 인해 각 나라에 저항적 민족주의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하나의 중국, 보통국가로서의 일본,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하는 “정상화의 역동성(dynamics of normalization)”이 각 국가들 자신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강한 국내정치적 추동력을 갖는 반면, 다른 국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현실이다. 즉 중국과 한국 또는 북한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가져올 지역적 위협에 대해 염려하고, 일본은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에서의 현상변경이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족자결과 주권을 강조하는 국지적, 지역적 역동성의 존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자유주의 원칙의 부과와 때로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냉전 이후의 동북아에서 변화의 추세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단순한 현상유지를 지향하기 보다는 평화적 전환의 방식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좀 더

19) 여러 형태의 민족주의의 비교를 위해서는 다위샤(Dawisha, 2002)를 볼 것.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위 차원의 변화가 수반하는 체제 차원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어떻게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등장을 제어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다른 성격의 민족주의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민족주의와 지역주의, 혹은 전 지구적인 다자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와 같은 고려는 개별 국가의 민주화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주어진 단위 간의 제도적 연계 모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북아에서 대안적인 2차적 상징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능성의 모색을 위해서는 단순한 근대적 단위로의 즉각적인 재편보다는 포괄적인 “하나”와 “보통”의 원칙 하에서 단계적인 과정이나 탄력적인 정체성과 제도에 대한 구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대만,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각각의 2차적 상징의 재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한 논의가 내부적 합의와 외부적 동의를 동시에 얻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전제 아래서 평화통일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의 일국, 사회주의가 주체가 되는 양제로서의) 일국양제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장기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면서 일각에서는 양국론과 대만 독립론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최관장, 2003). 또한 대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대만적인 정체성이 강화되고 이러한 추세가 중화 민족주의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김범석, 2005).

일본의 보통국가론은 “잃어버린 10년” 이후의 새로운 민족주의 분위기의 고조와 헌법개정 논의와 더불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막상 헌법 9조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전의 오자와, 하토야마, 나카소네 안의 차이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Itoh, 2001), 보통국가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는 핵과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으며, 미국과 국제연합의 정책과 상충되는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는다 등의 유보조향을 언급하는 등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北岡伸一, 2000). 하지만 현재의 국내정치적 상황의 전개는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이 군국주의로 복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북아 지역의 갈등요인의 제공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하겠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 간의 통일논의가 수렴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의 유일한

예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의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이다. 그러나 두 방안은 외형상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이질성을 갖고 있으며, 양측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전환 과정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최완규, 2002).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남북한 간의 정치적 대화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2차 북핵위기로 말미암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다시 북미 간의 쌍무, 혹은 6자회담의 다자적 의제가 되었다.

동북아에서 민주평화론을 넘어선 단위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왜 군사력을 독점하는 단일영토국가가 21세기 동북아의 궁극적인 단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져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신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깨어지지 않는 당구공이 아닌 다변화된, 혹은 복합적인 2차적 상징(2nd image diversified)의 구성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적 시도를 위해서는 크래스너(Krasner)가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 있는 주권(problematic sovereignty)”에서 “창의적인 변용(creative deviation)”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²⁰⁾ 양안관계에서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양체론, 평화국가와 보통국가의 성격이 혼합된 수정된 보통국가로서의 일본, 그리고 국가연합의 형태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검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동북아에 있어서는 단위 차원의 거버넌스의 문제 해결 노력을 선행 또는 병행함으로써 모든 행위자가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21세기 세계정치는 국제정치학 자체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으며,

20) 크래스너(Krasner, 2001). 이 책은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절충적인 혹은 변형된 주권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창의적인 변용이라는 용어는 바디(Badie, 2000: part III)에서 빌렸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체제의 안정을 도출한다는 식의 문제해결이론을 넘어서는 메타이론적 탐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점에서 단위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체제 수준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를 실질적인 정책 목표와 연결시키고 있는 민주평화론은 기존의 이론과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아울러 중요한 점은 그러한 접근이 갖는 적실성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현실은 이론과 정책의 논의에 있어서 특수성과 보편성의 고려, 즉 이 지역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기준의 적용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보편성을 대변하는 미국의 민주평화론의 입장은 장기적 전망에서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선순환의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²¹⁾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자유주의가 갖는 현실주의적 속성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각 단위가 보여주는 특수성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양안관계,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2차적 상징에 대한 대안적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현상유지와 전환의 문제점을 절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권위나 질서의 형태에 관한 고려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각 국가의 국내적 환경이 그러한 시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주장 또한 현실적 진단과 규범적 처방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의 실천을 통해서 지역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균형적인 검토와, 전환의 방법과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바로 지역적인 평화구축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진화론적 시각(evolutionary perspective)에서 볼 때 현 시점의 동북아시아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중엽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협력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발전이 개별국가의 민주주의나 민주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22) 미국은 현재 중국과 한반도에 있어서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전환을 지지 내지 묵인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 개디스, 존 루이스(John L. Gaddis)(2004), 《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전략》, 강규형 역, 나남출판.
- 고병익(1995),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소원과 통합”, 정문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 지성사.
- 김범석(2005), “대만민주화와 양안관계의 변화: 민주평화론을 적용하여”, 《국제정치논총》 45, 2.
- 남궁곤 편 (2005), 《네오콘 프로젝트》, 사회평론.
- 다나카 아키히코 (2000), 《새로운 중세: 21세기의 세계시스템》, 이웅현 역, 지정.
- 박봉현(2005), 《칸트와 동북아시아 평화》 오름.
- 백악관(2000), “21세기 미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 6, 2.
- 신옥희(2004), “구성주의 이론”, 우철구, 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 안병진(2005),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 《세계정치》 26, 1.
- 장달중, 임수호(2004), “부시 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 딜레마”, 《국가전략》 10, 2.
- 최관장(2003), “중국 통일 이데올로기와 양안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24.
- 최완규(2002),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 가능성 연구: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연구학회보》 6, 1.
- 최정운(1999), “미국적 정치이념의 장래”, 《미국학》 22.
- 하스, 리처드(Richard N. Haass)(2005), 《미국의교정책의 대반격》, 장성민 역, 김영사.
- 北岡伸一(2000), 《普通の國へ》, 中央公論新社.
- Acharya, Amitav (2003), “Regional Institutions and Asian Security Order: Norms, Power, and Prospects for Peaceful Change”, in M.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die, Bertrand (2000), *The Imported State: The Westernization of the Political Order*,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rkawi, Tarak and M. Laffey (2002), “Retrieving the Imperial: Empire and International

- Relations”, *Millennium*, 31, 1.
- Bush, George W. (2001),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2001, www.whitehouse.gov /president.
- Bush, Richard (2005), “Prospects for a U.S.-Centric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The Changing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East Asia”, December 1, 2005, Seoul.
- Chang, Pao-Min (1996), “The Dynamics of Taiwan’s Democratization and Crisis in the Taiwan Strait”,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8, 1.
- Cossa, Ralph A. and J. Khanna (1997),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73, 2.
- Dawisha, Adeed (2002), “Nation and Nationalism: Historical Antecedents to Contemporary Debate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 1.
- Deudney, Daniel (1996), “Binding Sovereigns: Authorities, Structures, and Geopolitics in Philadelphian Systems”, in T. Biersteker and C. Weber,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guson, Niall (2002), *Colossus*, The Penguin Press.
- Friedberg, Aaron L. (1993/1994), “Ripe for Rivalry: Prospects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 3.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Free Press.
- _____ (2004),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Re-Envisioning Asia”, *Foreign Affairs*, 84, 1.
- Gardner, Lloyd C. (1984), *A Covenant with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 Gong, Gerrit (2001), “A Clash of Histories: Remembering and Forgetting”, in G. Gong, ed., *Memory and History in East and Southeast Asia*, The CSIS Press.
- Ha, Young-Sun (2005), “Transformation of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U.S. Centric vs. China Centric”,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The Changing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East Asia”, December 1, 2005, Seoul.
- Hardt, Michael and A. Negri (2001),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 Hechter, Michael (2000), *Containing Nation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Hemmer, Christopher J. and P. Katzenstein,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 3.
- Ikenberry, G. John (1999), “America’s Liberal Hegemony”, *Current History* (January).

- Inoguchi, Takashi (1999), "Peering into the Future by Looking Back: the Westphalian, Philadelphian, and anti-Utopian Paradigm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 2.
- Itoh, Mayumi (2001),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 A Neo-Liberal Proposal for Article 9 in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Survey*, 41, 2.
- Kant, Immanuel (1983),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 Hackett Publishing Company.
- Krasner, Stephen D. ed. (2001), *Problematic Sovereignty: Contested Rule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 Mastanduno, Michael (1997), "Preserving the Unipolar Moment: Realist Theories and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1, 4.
- Mearsheimer, John J. (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1.
- _____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 Nau, Henry R. (2002), *At Home Abroad*, Cornell University Press.
- Owen, John M. IV (2001/2002), "Transnational Liberalism and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26, 3.
- Risse-Kappen, Thomas (1996), "Collective Identity in a Democratic Community: The Case of NATO", in P.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 Ross, Robert S. (1999), "The Geography of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23, 4.
- Ruoff, Kenneth (2001), *The People's Emperor: Democracy and the Japanese Monarchy, 1945-1995*, Harvard University Press.
- Russett, Bruce and J. R. Oneal (2001), *Triangulating Peace*, W. W. Norton.
- Shaw, Martin (2002), "Post-Imperial and Quasi-Imperial: State and Empire in the Global Era", *Millennium*, 31, 2.
- Snyder, Jack (2000), *From Voting to Violence*, W. W. Norton.
- Solingen, Ethel (1998), *Regional Orders at Century's Daw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lbot, Strobe and N. Chanda, eds. (2001), *The Age of Terror: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fter September 11*, Basic Books, 2001.
- Van Evera, Stephen (1990/91), "Primed for Peace: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3.
- Waltz, Kenneth N. (1959),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2003),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9, 4.
- Worlforth, William C. (2002), "U.S. Strategy in a Unipolar World", in G. J.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Cornell University Press.
- Yamazaki, Masakazu (1996), "Asia, a Civilization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75, 4.
- Zoellick, Robert C. (1997/1998), "Economics and Security in the Changing Asia-Pacific", *Survival* 39, 4.

Second Image Diversified: Democratic Peace Theory and Northeast Asia

Wookhee Shin*

Changes in the 21st century world politics show that previous paradig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ed to be reconsidered, and for that purpose, meta-theoretic inquiries beyond problem-solving theories emphasizing system stability are required. In that respect, democratic peace theory, which pursues a possibility of system-level transformation through unit-level changes and relates the attempt with substantial policy objectives, can be differentiated with other theories. However, the matter of relevance is another important aspect to be analyzed. American thesis of democratic peace representing a new standard in the early 21st century world politics has its limits in inducing virtuous cycle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even though it may have long-term potential. On the one hand, the fact is due to realistic characters of American liberalism, and on the other hand, it is originated from the peculiarities of units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fore, we should think about the possibilities of “second image diversified” in Taiwan strait,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it means serious consideration of political orders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of status-quo and transformation at the same time.

Key words: post-Cold War, Democratic Peace, Northeast Asia, the 2nd image

*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Foreign Policy,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E-mail: shinir@snu.ac.kr